개발계획 남발…지자체 혼선

정부, 신성장동력 17개 선정…사업 내용도 녹색뉴딜과 중복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헬스케어(Health Care·의료서비스) 등 17개 산업이 선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쏟아낸 신성장동력을 비롯해 한국형 뉴딜 10대사업, 녹색뉴딜(New Deal) 등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정책들은 정작 세부 사업 계획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들이 정책방향을 잡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신성장 동력으로는 녹색기술산업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등 6개, 첨단융합산업 분야에서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등 6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등 5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규모가 지난해 222조원에서 2018년 700조원대로 늘어나고, 신성장동력 수출액도 연평균 18% 수준으로 증가해 1천771억 달러에서 9천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자리 창출 규모도 지난해 대비 향후 10년간 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처리기술 등 21개 원천기술과제와 기후변화 예측·모델링 개발기술 등 27개 연구개발 과제를 담은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7개 신성장동력을 녹색뉴딜 사업과 녹색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신성장동력 비전을 제시했으나 녹색뉴딜 정책을 포함한 기존 정책과의 중복 추진 등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포장만 바꿔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녹색뉴딜사업 9대 분야 36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사업 분야와 겹치고, 고부가서비스 산업도 기존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기 보다는 지역숙원사업과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바람에 솔직히 내용 파악조차도 힘들 지경이고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경우가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다"며 "정부가 모든 사업을 주관한다는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챙기는 것이 오히려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가 중복 발표한 대책 사례

중복사업	주요 대책 및 대책명(발표시기)
4대강 살리기	균형발전위원회 '2단계 지역경제활성화대책'(지난해 12월) '한국형 뉴딜정책 10대 프로젝트'(지난해 12월) '녹색뉴딜사업'(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린카·그린홈·청정에너지 확산, 친환경 광원 발광다이오드(LED) 이용 확대 등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지난해 8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지난해 9월) '녹색뉴딜사업'(1월) '신성장동력사업'(13일)
경남·호남고속철도 개통	'광역경제권 개발 30개 선도 프로젝트'(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녹색뉴딜사업'(1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환경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녹색뉴딜사업'(1월) 신성장동력사업(13일)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광주시·전남도 등 "지역경제 파탄 부를 졸속 정책" 반발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광주시, 전남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이 전면 허용키로 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가 산업·인구의 블랙홀'로 불리는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대폭해제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림으로써 지방경제의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선(先)지역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저버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화한 것은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졸속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5+2'는 그대로, J프로젝트는 절반으로

광주·전남 현안사업 '반토막'

최상철 균발위장 밝혀…의료단지 등 지역요구 외면

광주·전남지역의 미래상을 결정할 대형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철 의지에 의구심이 더해가고 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2일 강운태 의원을 만나 '5+2 광역경제권'의 수정을 거부하고 J프로젝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이명박 정부의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부정적, 소극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날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 위원장과 강 의원의 만남은 최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강 의원은 광주시와 전남도 측으로부터 현안 사업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은 후 만나 비교적 자세히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더욱이 두 사람은 20여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여서 최 위원장이 가감 없이 정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5+2 광역경제권'은 그대로 간다=최 위원장은 이날 강 의원에게 "'5+2 광역경제권'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다만,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 3월 기초생활권 프로젝트, 5월 초광역권 프로젝트 발표 때 호남 소외가 보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프로젝트 축소 불가피=최 위원장은 J프로젝트에 대해 "전남도가 원하는 간척지 3천만평 중 1천500만평을 양도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지역에 F1 대회 개최지인 삼호가 포함돼 있어 문제가 안 될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전남도가 간척지 양수 가격으로 평당 2만원을 원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싸서 단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혀 간척지 양도 면적과 가격에 대한 전남도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른 지역과 나눠 가져라=최 위원장은 또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광주 유치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울산·부평·군산 등이 있어 전부를 줄 수는 없다. 상용차 등 일부만 주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고 말하더라"라고 강의원이 전했다.

나아가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개인 생각으로는 의료기기(원주)와 신약(오송) 부문은 거의 확정적이다"며 "나머지는 서비스 분야가 있는데 영남과 호남에 나눠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즉, 그 내용을 떠나 광주시와 전남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는 모양새만 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리저리 나눠진 산단과 클러스터는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타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최 위원장은 광주 R&D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부처 간 조율이 끝나 1월 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경북의 그린에너지 산업이 선도프도젝트에 포함돼 있어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중복된다는 우려에 대해 "경북은 원자력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광주·전남은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 최 위원장은 강 의원이 이날 제안한 광주~나주, 광주~화순 지상철 연결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남~제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역 현안 계획 추진 상황 〈13일 현재〉

사업	지역 요구	정부 방침
5+2 광역경제권	6+2 (광주·전남·북 분리)	5+2 관철 지역현안 보완
J프로젝트	사업부지 3천만평, 간척지매입비 평당 2만원	1천500만평 축소, 단가 상향조정
자동차부품클러스터	광주에 전 단지 조성	상용차 등 일부 할당
첨단의료복합산단	광주·전남 집중 유치	전국 분산
전남~제주 해저터널	국가사업 확정	타당성 조사 후 결정

광주·전남지역 대형 현안 추진 계획이 정부에 의해 축소되거나 사업 방향이 달라져 지역주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3천만 평 개발 계획에서 면적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해남·영암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예정부지. 〈광주일보 자료사진〉

증권·신탁업 등 겸영 자본시장 벽 없어져

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종의 벽을 허물고 겸영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개정안 내용을 수렴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한해서 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간주하고, 파생상품 투자권유시 투자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한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권유 대행위탁을 금지하는 등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연합뉴스